

# 문 “빅딜” 제의...김 “수용 어렵다” 거부

〈재인〉

〈무성〉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시한(8월13일)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5일 오프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을 공식 제안,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여야 간의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 현재로서는 ‘빅딜’ 성사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 오프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에 ‘빅딜’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 없이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만 조정하는 선관위 안에 찬성한다”며 “여야가 선관위 제안을 중심으로 통크게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이번 기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정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논의 방식은 국회 정개특위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선거구 재획정과 맞물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처럼 야당 대표께서 제안한 만큼 신중하게 잘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 입장에 어떤 개혁을 위해 다른 부분을 붙여서 한다는 건 조금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휴가에서 복귀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운데)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픈 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이전

### 야당 내부서도 의견 통일 안돼 ‘균열 양상’...협상 난항 예상

고 말했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다.

황진하 사무총장 역시 “권역별 비례제를 채택하면 의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둘을) 연동시킨다는 것은 ‘딜’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권역별

비례제 도입시 호남에서 얻는 ‘실익’보다 영남권을 야당에 내어주게 되는 등 ‘손해’가 더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각 당 내부에서조차 통일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권역별 비례대

표제 도입과 관련, “정당·정파 간 유·불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정치개혁을 할 수가 없다”면서 “지역 구도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에선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 대표의 제안에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서 투톱 ‘균열’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서 나누고 주고받는 방식으로 하는 건 현재로서는 좀 빠른 판단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김동철 “대선주자 참여 비대위 만들자”

문재인은 ‘묵묵부답’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사진)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대선 주자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데 이어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공론화에 나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은 5일 광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24일 문 대표를 만나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대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다”며 “당내 원로와 중진들을 우선 만나 이해를 구하고 계파를 떠나 비대위 체제 출범에 대해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 대표가 퇴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주자 자격으로 비대위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혁신위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표직을 던지고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을 총력 체제로 전환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가 일주일도 못 차려질 것 아니라는 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저지단체장들도 비대위에

참여할 수 있다”며 “늦어도 다음 달 초순까지 당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내 의원들의 서명결과 관련, 김 의원은 “당내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문 대표가 끝까지 비대위 구성에 반대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 의원의 비대위 구성 제안에 문 대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부정적 의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故박상천 빈소 조문행렬...손학규도 방문

서울 강남성모병원 박상천 전 민주당 대표의 빈소에는 4~5일 여야 대표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한때 동고동락했던 선후배 및 동료 정치인들도 의회주의자로서 박 전 대표의 합리적인 면모를 추억하며 고인의 유지를 기렸다.

장례 2일째인 5일에는 강진에서 침거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 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손 전 고문과 고인은 대선 참패 직후인 지난 2008년 2월 통합민주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통합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탄생할 때 각각 통합민주당과 민주당의 대표로서 통합을 성사

시켰다. 야당사의 한 획을 그었던 공동주역이었던 만큼 당연히 조문을 가야 하지만, 손 고문은 자칫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문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가 정치권의 시선보다는 인간의 도리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 권노갑 상임고문, 한화갑 전 의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주선·민병두·유성업 의원, 김태식 전 국회부의장 등 당 관계자들과 김진태 검찰총장, 한나라당 최연희 전 의원 등 법조계 선후배 등이 조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롯데 사태’ 힘빠진 與의 노동개혁...野 “재벌개혁부터” 맞붙

정부, 오늘 재벌 개선대책 협의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에 대해 가속페달을 밟자 새정치연합이 재벌개혁으로 맞불을 놓는 등 ‘개혁 화두’를 놓고 여야가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5일 노동개혁을 연내에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열흘간의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이날 처음으로 당 회의를 주재한 김무성 대표는 “경제살리기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 선진화”라면서 일성으로 노동개혁을 역설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이 이끄는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도 6일 첫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매주 한두 차례

노사 각계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을 갖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실업률이 계속 증가 추세인데 우리 아들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현 세대의 책무”라며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 등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 노동계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에 ‘울인’할 태세지만 최근 ‘롯데 사태’로 인해 재벌개혁 이슈가 부각되면서 노동개혁 이슈가 일정부분 가리게 된 점은 난감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이날부터 재벌

개혁 맞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새정치연합은 재벌경제 체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고 진단한 뒤 경제민주화 추진을 ‘차별전’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공개 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이슈물이에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재벌경제 체제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아니고,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한 것이 한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대기업은 더 이상 국민경제에 낙수효과를

주는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뿔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이종걸 원내대표 주최로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논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후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검찰,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재수사

진술 번복 ‘회유’ 조사

검찰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심학봉(구미 갑) 의원의 여성 보험설계사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은 5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이 사건을 담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 형사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들이 투입된다. 검찰은 사건의 실제

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면 심 의원과 40대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먼저 심 의원과 A씨가 성관계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는데 수사의 조정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A씨가 지난달 24일 ‘심 의원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같은 달 27일과 31일 이휘진 2차, 3차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사건 무마를 위한 시도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건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1장 (초회 공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계좌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찰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